

광역의원 광산·순천 1명씩 늘고 합평 1명 줄어

선거구 확정안, 광주 수완동 독립 제5선거구로

기초의원 광주 68명·전남 243명 그대로 유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선거구 확정안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숫자는 현행 19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이 기존보다 1명이 늘었다. 전남도의회는 52명으로 현행 숫자를 유지한다. 기초의원 숫자는 광주와 전남 각각 현행 68명, 243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선거구 확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열어 행정동별로 최종 선거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 광역의원 1명 늘어**=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지역구 의원 숫자는 기존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기존 광산 3선거구였던 수완동이 독립돼 새롭게 광산 제5선거구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광산 선거구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반면, 인구 감소로 선거구 축소가 예상됐던 동구의 경우 기존 광역의원 수 2명을

지켰고, 남구는 봉선1동이 제2선거구에서 제1선거구로 편입됐다.

북구는 기존 국회의원 북구를 선거구였던 임동과 오치 1동·2동이 북구갑 선거구에 편입됐고, 제6선거구였던 일곡동, 삼각동은 제4선거구에 편입됐다.

광주시는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대로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 광역의원 순천 1명 늘고, 합평 1명 줄어**=인구 상·하향선에 따른 선거구 변화로 광역의회(전남도의회) 선거구는 순천에서 1개 늘어나고 합평에서 1개 줄어든다. 기초의회(시·군의회)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나주에서 선거구 1곳이 늘어나고, 신안에서 1곳이 줄어든다.

전남지역 선거구별 인구 평균은 3만6459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6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선거구 변화가 생긴다. 선거구 최소 인구는 1만4584명이고, 최대 인구는 5만 8334명이다.

이를 적용함에 따라 순천에서 1개 선거구가 늘어나 기존 선거구가 5곳에서 6곳이 된다. 현재 순천 2선거구의 왕조2동이 6선거구로 독립 신설된다. 반면 합평은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 선거구로 통합된다.

지역별 선거구 변화도 불가피하다. 여수는 3선거구에 미평동과 만덕동이 편입되고, 4선거구의 화양면과 화정면은 5선거구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6선거구에는 주상동, 삼일동, 묘도동이 신규 편입된다.

목포지역은 상동이 기존 1선거구에서 4선거구로, 부주동은 4선거구에서 5선거구로 바뀐다.

나주는 다도면이 2선거구에서 1선거구로 옮기는 대신, 혁신도시가 위치한 빛가람동이 2선거구로 신규로 추가된다. 광양에서는 골약동이 3선거구에서 2선거구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의 경우 나주 빛가람동의 인구 급증에 따라 기초의원이 1명 늘어난다. 대신 신안에서 기초의원 1명이 줄어든다. 이

같은 개정안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전남도는 7일께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를 확정할 방침이다.

◇**일부 혼선 불가피**=광역의원 및 시·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은 2일부터다. 하지만, 선거구 확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5일에야 통과될 것으로 보여 혼선이 예상된다.

광주지역 한 출마자는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선거구 확정안이 예비후보 등록일보다 늦어져 예비후보 등록 의미가 사라졌다”고 하소연 했다. 예비후보 등록신청일을 넘겨 선거구가 확정되다보니, 새롭게 생겨나는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확정일 이후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이 늦어지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도 덩달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출마’ 강기정 4일 서구서 출판기념회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강기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전 국회의원)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서구 상무지구 옛 인피니티 건물에서 자신의 책 ‘강기정의 새로운 생각-전환’의 출판 기념회를 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오후 6시까지 7시간여 동안 참석자와 강자문위원장이 ‘마라톤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자문위원장의 이 책에는 자신이 독일에서 경험하고 공부했던 4차산업혁명과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 자신의 ‘싱크탱크’인 ‘광주성장



the CUBE’와 그동안 진행했던 정책토론회의 내용도 집대성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했던 ‘광주역은 광주의 새로운 중심’ ‘햇빛이 흐르는 광주천’ ‘광주 맞춤형 빅데이터 산업 플랫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연결과 공유의 창작플랫폼’ ‘빈집의 귀환’ 등 다양한 정책이 결집되었다.

또 ‘최저임금과 하도급법 개정’ ‘일자리 만들기 풀책’ ‘기술창업’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법도 담겼다.

김병내 전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남구청장 출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병내 전 행정관이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5일에는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등 광주 남구청장 출마를 본격화한다.

김 전 행정관은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한 청와대 출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남구민의 선택을 받아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남구가 먼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관으로 광주·전남과 청와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온 김 전 행정관은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광주 남구 강운대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광역시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팀장을 지냈다. /오광록기자 kroh@

문 대통령 “위안부, 가해자가 끝났다고 해선 안돼” 日에 직격탄



향일의 현장에서 99주년 3·1절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와 5부 요인, 애국지사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절 기념사...“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

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1 운동의 의의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

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에게 헌법 제1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태극기와 애국가라는 국가 상징을 물려주었다”고 밝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우리 헌법이 전명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과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1948년 중 어느 해를 대한민국이 수립된 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건국절’ 논란에 확실한 쐬기를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

3·1절에 재점화된 ‘젠세이’ 논란

장제원 “박범계도 젠세이 발언” 박범계 “당시 권의원 자세 지적” 하태경 “젠세이당과 야합 안해”

3·1절에 정치권에서 ‘젠세이’를 의미하는 ‘젠세이’라는 일본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일 “3·1절을 앞두고 이은재 의원이 일본말인 ‘젠세이’를 사용했다고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질은 제쳐 놓고 직업 말단적인 말꼬리만 잡아서 막말을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은재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질의하던 도중 유성엽 교문위원장으로 부터 자제를 받아 “위원장님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왜 자꾸 깡판 놓으시는 거냐” “왜 젠세이를 놓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정치권과 온라인 공간에서 비판론이 제기되자 홍 대표가 “본질은 외면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과벨스식 선동사화로 가는 것에 우려한다”며 이 의원을 두둔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젠세이’와 같은 발언을 무척 부끄러워한다”면서도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의원께서도 상임위에서 ‘젠세이’라는 말을 쓰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과거에 이같은 발언을 한 적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수석이 이걸 어떻게 찾아내셨냐”며 “제가 발언한 ‘젠세이’는 그 앞에 ‘소위’를 붙이고 권 의원의 자세를 지적한 발언이다. 반면 이 의원은 데시벨을 높여 ‘깡판’ 발언 뒤에 점잖게 말하는 유성엽 위원장을 향해 ‘젠세이’를 말했으니 이진 격이 다르지 않나”고 반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항상 젠세이만 하는 극우 젠세이 정당과 절대 야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